1. 삼성전자의 재무구조 조사

자산과 부채, 자본 총계는 DART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정기공시자료인 삼성전자의 2026년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재무제표와 기준일을 맞추기 위해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거래소(KRX)에서 확인한 6월 30일 삼성전자 보통주 종가는 334,000 원이었으며, 여기에 상장주식수 5,846,278,608주를 곱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은 약 1,952.66조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차변	대변
자산총계 **약 759.48조 원**	**부채총계** **약 180.17조 원**
	자본총계 **약 579.31조 원**

Chapter 2 사전 영상강의에서 배운 재무상태표의 기본 관계인 대차평균의 원리(자산 = 부채 + 자본)도 실제 수치에 대입해보았습니다. 부채 180.17조 원과 자본 579.31조 원을 더하면 약 759.48조 원으로 자산총계와 일치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재무제표상 자본과 시가총액이 서로 다른 이유

교수님께서 Chapter 2 사전 영상강의에서 강조하셨고 교재 28쪽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회계상의 장부가치(Book Value)입니다. 반면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한 자기자본의 시장가치(Market Value)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자본총계는 약 579조 원인 반면 시가총액은 약 1,953조 원으로 약 1,373조 원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 차이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 전망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무제표상 자본은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순자산을 나타내는 반면, 시가총액은 여기에 시장이 평가한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두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우선주 매입·소각 제안 분석

연합뉴스 기사를 읽어보니 라이프자산운용은 삼성전자의 남은 주주환원 재원 약 63조 원을 전부 현금배당에 사용하기보다 우선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사주를 더 매입하자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선택했는지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약 26.7%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를 직접 계산해보니 보통주 1주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우선주는 약 1.36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규모의 재원을 사용하더라도 우선주를 매입하는 쪽이 더 많은 주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재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에서 또 눈에 들어온 것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문제였습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을 합치면 약 10%인데, 보통주를 소각하면 전체 보통주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 회사의 지분율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담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니 이번 제안에서 우선주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지분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방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현금배당과 소각의 차이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소각은 실제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후 회사가 같은 수준의 이익을 낸다면 주당이익이나 주당배당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종합해 우선주 소각이 배당보다 항상 우월하다기보다는, 현재처럼 우선주의 할인폭이 크고 보통주 소각에는 지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외국인 지분율 조사 및 토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KRX)에서 삼성전자 보통주의 연도 말 외국인 보유비중을 찾아 최근 5년간의 수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점	외국인 지분율
2021년 말	51%
2022년 말	49%
2023년 말	53%
2024년 말	49%
2025년 말	51.2%

최근 5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낮았던 해가 49%, 가장 높았던 해가 53%였고, 거의 매년 50%를 기준으로 조금씩 오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최근 5년 동안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보통주의 절반가량을 꾸준히 보유해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2분기 말에는 외국인 보유비중이 약 46%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삼성전자를 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는 외국인이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다면 외국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직접 찾아보면서 주주의 국적과 회사의 국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설립 및 본점 소재지, 실질적 관리장소, 과세권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어디에서 설립되었는가입니다. 상법 제171조를 찾아보니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제172조에서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었고 본점도 국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의 설립 자체가 외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회사를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입니다. 법인세법도 함께 찾아보니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거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보면서 회사의 국적을 판단할 때에는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실제 경영과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어느 범위까지 부과하느냐입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범위도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한 뒤 저희는 외국인 지분율 50%라는 숫자는 삼성전자의 소유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그 숫자만으로 삼성전자를 외국 기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참고한 자료

-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거래소(KRX), 삼성전자 주가 및 외국인 보유비중 자료
- 삼성전자 Investor Relations, 주식정보 및 주주구성 자료
- 연합뉴스,「라이프자산운용, 삼성전자에 우선주 매입·소각 제안」, 2026.9.15.
- 국가법령정보센터,「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인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